



영국노총의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동향

정민아 (영국 셰필드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머리말

영국노총(TUC)이 지난 9월 7일부터 사흘간 리버풀(Liverpool)에서 제146차 정기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1868년에 설립된 영국 최대 노동조합단체인 영국노총은 2014년 1월 현재 54개 노조, 585만 5,271명의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¹⁾ 영국노총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기대의원대회의 두 가지 주요 임무는 지난 12개월간의 주요 활동 보고서인 일반위원회 보고서를 일반위원회로부터 제출받고 다음 해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주로 각 소속 노조들로부터 사전에 발의되어 수정 과정을 거친 최종 아젠다의 안건들을 논의한다. 일반위원회 보고서는 노총의 1년간 주요 활동을 요약·평가하고 있고, 최종 아젠다는 이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의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영국 노동계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영국노총의 역사, 조직,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안정화(2003),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2009), 권병희(2011) 등이 개괄하고 있고, 정기대의원대회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정희(2013)가 대회 참관과 대의원 및 영국노총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바,²⁾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영국노총의 두 주요 문건 내용을 토대로 올

1) TUC(2014), *TUC Directory 2014*, p.78.

2) 안정화(2003), 『각국 노동조합 전국 중앙조직의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 한국노동중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센터(2009), 「국제노동단체 소개: 영국-TUC」; 권병희(2011), 「영국노총의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10월호, pp.79-87,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2013), 「영국노총

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들을 개괄하고자 한다.

■ 일반위원회 보고서³⁾

영국노총 사무총장인 프란시스 오그레이디(Frances O'Grady)는 일반위원회 보고서 첫머리에서 영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대응 조치들로 인해 경제회복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다수는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수에게 공정한 임금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개최한 수많은 노총의 행사 및 캠페인 그리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 활동들이 일반 대중과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계와 고용주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여러 산업 부문 근로자들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슬로건 '영국은 임금인상이 필요하다(Britain needs a pay rise)'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한 100여 건의 2주 공정임금 캠페인 공세를 통해 임금동결에 의한 실질임금 하락과 집세를 비롯한 물가상승이 결합하여 빚어낸 전반적인 생활수준 하락을 정치 및 미디어 논쟁의 중심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일반위원회 보고서는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가 정한 다섯 가지 중심사업 범주인 ① 일자리, 성장 및 새로운 경제, ② 공정임금 및 생활임금, ③ 좋은 서비스와 복지, ④ 일자리에서의 존중과 발언권, ⑤ 강한 노조 등으로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표 1 참조).

제1절 일자리, 성장 및 새로운 경제 부분의 주요 내용은 경기회복의 지체 원인과 경제활성화, 노동시장의 불건전한 변화,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점, 기업의 탈세 위험과 공정한 과세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 약 3년 정도가 걸렸던 과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불황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회복하는 데 기간이 두 배 이상 걸렸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제회복 지체는 정부의 경제 관련 결정들이 불량한

의사결정 시스템: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 참관기, 『국제노동브리프』 10월호, pp.72~83, 한국노동연구원.

3) TUC(2014), Congress 2014 General Council Report.

〈표 1〉 영국노총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반위원회 보고서 개요

2013~2014년 활동 개괄	
제1절 일자리, 성장 및 새로운 경제	경제, 노동시장, 근로시간, 주택, 에너지, 환경, 기업의 거버넌스와 노동자 자본, 교통, 세금, 산업정책, 자원조달, 국제교역, 국제발전, 학습과 기술
제2절 공정임금 및 생활임금	공정임금 캠페인, 국가최저임금, 생활임금, 신산업 임금위원회, 연금, 임원급여
제3절 좋은 서비스와 복지	공공서비스, 공공부문 급여와 연금, 보건과 사회적 돌봄, 교육, 지방정부, 공공 서비스 연계 그룹, 공공서비스 포럼, 복지
제4절 일자리에서의 존중 및 발언권	일자리에서의 존중, 평등, 장애인 노동자, 성적소수자 노동자, 여성 노동자, 인종 평등, 청년 노동자, 노동자 발언력, 건강과 안전, 이주, 만족스러운 일자리와 공급사슬, 사회적 유럽
제5절 강한 노조	조직화, 국제적 연대, 영국노총 교육, 직무기술, 노조학습, 지역노조협의회 및 실업자 센터
제6절 영국노총 행정	

일자리를 양산하고 실업률을 높이며 급여가 높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한편 명목임금 증가율을 낮춤으로써 가계의 실질수입과 소비능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총이 주력한 사업은 은행의 기업 자금대출과 공공시설기반 투자를 위한 정부의 국가투자은행 지원을 장려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여러 정치 정당과 사용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노총은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은퇴자와 파트타임 및 임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건전한 창업이 아닌 불안정한 고용의 한 형태로서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전국적인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서부, 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등 네 개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감소했다는 점,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일자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등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렸다. 또한 장시간 노동 및 유연근로 관련 법 규정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왔다. 유연근로 관련 법은 지난 6월에 확대되었으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법 규정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총은 공정 과세를 위한 활동도 지속해 왔는데, 정부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buse rule: GAAR)이 가진 한계가 기업탈세를 부추긴다는 점을 제기하는 한편 금융거래세를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⁴⁾로 운영하자는 캠페인을 펼쳐 큰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제2절 공정임금 및 생활임금에서는 공정임금을 위한 캠페인과 그 성과, 국가최저임금 인상과 준수, 생활임금의 보급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인 생활수준 하락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평균 실질근로소득이 2008년보다 주당 40파운드 낮아졌으며 모든 공공부문과 다수의 민간부문에서 실질임금이 매달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총은 올봄 공정임금을 위한 2주 공정임금 캠페인을 다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수준 하락 문제를 정치 논쟁과 여론의 중심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급여 인상과 연금 개선을 요구하는 소속 노조들의 쟁의행위를 후원하였다. 한편 노총은 국가최저임금 인상을 높이기 위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 및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LPC)에 전달하였다. 올해 10월부터 일반 성인 최저임금률은 3% 인상되어 시간당 6.50파운드가 되었고, 기타 최저임금률은 2%가량 인상되어 18~20세는 시간당 5.13파운드, 16~17세는 시간당 3.79파운드, 19세 미만의 견습생 혹은 견습생 첫해에는 시간당 2.73파운드의 최저임금을 받게 되었다. 2012~13년, 2013~14년의 성인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8%, 1.9%, 기타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1%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총은 노조, 기업혁신기술부(DBIS), 저임금위원회(LPC), 국세청(HMRC)으로 구성된 모임을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국가최저임금의 보다 강력한 시행을 요구했다. 2013년 10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미준수 기업 명단 공개와 2014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미준수 기업 벌금 인상⁵⁾은 소기의 성과다. 이와 더불어 노총은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캠페인단체인 영국시민(Citizens UK) 및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과 긴밀히 공조하여 생활임금 확산 캠페인을 펼쳤는데, 사용자의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에만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생활임금 지급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절 좋은 서비스와 복지에서는 공공서비스 아웃소싱과 민영화, 공공부문의 급여동결과 착취적 고용, 복지시스템 방어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외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이 23% 증가했다. 그러나 여론은 세간의 이목

4) 로빈후드세는 금융부문에 부과되어 빈곤퇴치와 전 세계적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영국의료보험시스템(NHS)과 학교 및 아동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

5) 5,000파운드에서 20,000파운드로 인상됨.

을 끌었던 아웃소싱의 실패 사례들과 영국 우체국(Royal Mail) 매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공공서비스 아웃소싱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 회의적이다. 노총은 전국적 캠페인을 통해 공공서비스 축소와 아웃소싱의 폐해를 알리는 한편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과 공조하여 아웃소싱이 주요 공공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출간물을 연속적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공영 철도를 위한 작전(Action for Rail)’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철도의 공공소유와 요금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중의 넓은 지지를 구축하고,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교육(Education Not For Sale)’ 캠페인에 착수하여 학교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한편 노총은 지난 4년간의 재정긴축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임금동결과 착취적 고용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임금동결 종결 및 생활임금 지급 장려와 호출형 근로계약(zero-hours contracts)의 착취적 사용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함과 동시에 공정한 임금 및 연금을 요구하는 공공서비스 노조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시스템의 후퇴를 막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안전망 구축(Saving Our Safety Net)’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실업 관련 수당 지급을 실직 후 5주까지 늦추겠다는 정부 제안에 반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지 축소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4절 일자리에서의 존중 및 발언권에서는 최근 호출형 근로계약의 확산과 고용재판 수수료 인상, 해고 및 정리해고에 대한 보호 약화 등이 고용관계에서의 근로자 권리를 주요하게 약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일자리에서의 근로자 권리 개선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총의 캠페인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 청년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호출형 근로계약의 오·남용 반대 캠페인은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었으며, 50세 이상의 고령 여성 근로자 이슈들을 다루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Age Immaterial)’ 캠페인 역시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제5절에서는 강한 노조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직화와 국제연대, 교육, 기술, 학습 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노총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것은 지난 7월 10일에 있었던 노조연합 파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화했던 것과 ‘조직화 아카데미(Organizing Academy)’, ‘변화 주도(Leading Change)’ 등 영국노총이 운영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부문 사용자 2,800명을 비롯해 52,000명의 조직 대표들을 훈련시킨 것을 들 수 있다.

■ 주요 의제 : 최종 아젠다⁶⁾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종 아젠다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의제들을 소개하는 문건으로, 각 소속 노조에서 최대 두 개의 안건을 사전에 제출받아 이전 대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배제하고 관련 이슈들은 노조의 동의를 거쳐 같은 안건으로 묶는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는 78개의 의제가 최종 아젠다에 수록되었다. 포함된 의제는 작년에 이어 일반위원회 보고서와 동일한 다섯 가지 주요 사업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는 다섯 가지 범주의 주제가 다음 해에도 영국노총 사업활동 방향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많은 의제들 가운데 청년노동자의 취약성과 기회, 이주(immigration)와 이민법, 국민의료보험시스템(NHS)의 지속가능성 등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대의원대회는 청년노동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계약 등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빛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윤 획득을 위해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대회는 호출형 근로계약을 통한 청년노동자의 착취를 반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페이데이론⁷⁾ 업체의 대안으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을 지원하며, 청년노동자들이 더 쉽게 교육 및 견습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캠페인을 일반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극우성향의 영국독립당(UKIP)과 우파 미디어는 관대한 이민정책이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여러 공공서비스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나아가 영국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의원대회는 영국독립당과 같은 극우조직은 재정긴축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공헌한 바가 없는 반면, 이주 노동자들은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여러 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 사실을 소속 노조 및 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대중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일반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2021년이 되면 국민의료보험시스템에 대한 지출이 국민총생산(GDP)의 6.1%까지 줄어들 예정으로, 영국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면에서 대다수의 다른 유럽 국가들보

6) TUC(2014), Congress 2014 Final Agenda: Motions and Nominations for the 146th Annual Trades Union Congress.

7) 월급 날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소액대출.

다 뒤쳐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대의원대회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줄이는 것은 국민의료보험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낳게 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재정 지원에 관한 정부의 재고를 계속해서 요구하도록 노총에 요청했다.

■ 맺음말

지금까지 영국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 주요 문건인 2014년 일반위원회 보고서와 최종 아젠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소개된 내용들은 136쪽에 달하는 일반위원회 보고서와 52쪽에 이르는 최종 아젠다가 담고 있는 방대한 이슈들 가운데 정치권 및 여론의 주목을 좀 더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것들이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임금동결 및 실질임금 삭감, 서비스 및 복지 축소, 재정긴축 등의 정부 조치들이 현재의 영국 경제 및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알리는 정부의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 수긍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노동계의 인식이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슬로건이었던 ‘선성장 후분배’의 폐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더욱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가 소비를 줄이는 재정긴축의 지속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방향은 영국노총의 지적처럼 소수 1%의 배만 불리고 건전한 분배를 해쳐 대중적 불만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11**